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 확립한다"('23.3.23)
- ②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통해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에 나서..('23.3.22)
- ③ 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23.3.16)
- ④ 국민권익위, 청렴도 우수기관·외부 전문가와 청렴도 낮은 기관 대상 청렴도 제고에 나서('23.2.28)
- ⑤ 국민권익위, 아프리카에 K-청렴정책 전수한다('23.3.28)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 확립한다”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기관 비공무원(무기계약직·기간제)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권고*

(23. 3. 23. 국민권익위)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지난 14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센터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첫 결과물이다.

※ 신설된 센터 주요업무: ▲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 공공부문 채용·인사담당자 전문교육 ▲ 공공부문 사규컨설팅 ▲ 공공부문 채용관련 전수조사 ▲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영 규모는 42만 8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사·공단 등)의 임직원 채용은 채용단계별 상세한 공정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과 지침이 있는 반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할 공통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채용비리 사례 〉

- ▶ ◇◇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여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 각 징역 1년 6개월 · 1년 선고('22.8.12, 언론보도)
- ▶ ○○도 사업소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기준 변경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22.6.12, 언론보도)
- ▶ □□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청탁지원자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22.5.3, 언론보도)
- ▶ ●●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 벌금형 선고('20.5.31, 언론보도)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 전문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공정채용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였던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채용 절차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제1조(목적)	‘공정채용 기준’ 운영 목적
제2조(정의)	채용비리 정의,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정의 등
제3조(적용범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신규채용 시 적용
제4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채용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기구(인사위원회 등) 운영
제5조(심의기구의 구성)	3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 위촉
제6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	심의기구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정심사를 위한 심의기구 위원에 제척·회피·기피
제8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심의기구 심의시 회의록 작성·보관(심의간건 및 심의결과 등)
제9조(채용원칙)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 특별채용 금지(원칙)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채용공정성을 위한 채용담당부서 의무(문제유출 금지 등)
제11조(채용절차 등)	서류·면접 심사 의무화, 체력검정시 ‘국민체력100’ 활용 가능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계획 수립·변동시 심의기구 의결, 소속기관 등 채용도 본부의 관리감독
제13조(채용공고)	공고기간 5일 이상 의무화(단시간 근로자 등은 단축 가능)
제14조~15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고용)	6개월 이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긴급충원 위해 대체인력뱅크 운영 가능
제16조(시험위원 선정 등)	서류·필기·실기·면접시 외부위원 위촉, 사전 교육 및 서약서 징구 *공무직 채용 시 외부위원 1/30이상, 9개월 이상 2년 이하 단기근로자는 1명
제17조(시험위원의 제척·회피 등)	내외부 위원위촉시 제척·회피·기피 사유, 사전설명, 위반시 제재
제18조(원서접수)	채용서류 거짓 작성 금지,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블라인드 채용)
제19조(서류전형)	서류전형 심사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20조(필기전형 등)	필기전형 진행시 시험과목, 문항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21조(면접전형)	면접전형 심사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가점 사항 및 동점자 처리기준 사전 규정화, 관련사항 공고문 명시
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24조(채용검정위원회의 운영)	채용검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채용과정 적성성 점검
제25조(채용결격사유)	채용 결격사유 준용 및 사전 확인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채용계획 수립, 서류·면접시 감사부서 입회, 감사부서의 자료 열람
제27조(합격취소 등)	허위서류 제출자 등에 대한 합격취소, 사전 확인서 징구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 11)’ 적용
제29조(채용 구비서류)	최종합격자 채용 시 구비 서류 목록 및 채용부서의 확인
제3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에 따른 보관 및 개인정보 폐기
제31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통해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에 나서...

올해 1천 5백여 명 대상으로 총 16회 대면·온라인 교육 병행 실시

(23. 3. 2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부터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고위 관리직 대상으로 한 ‘청렴리더십 고위직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리더십 함양과 청렴실천 역량을 강화해 고위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의지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오늘부터 시작된 교육은 올해 16회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관리직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반부패법령 이해수업과 부패 상황별 토론수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통 판소리를 통해 청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청렴연수원 누리집(<https://edu.acrc.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반부패와 청렴의 가치는 정부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라며,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을 통해 청렴한 업무관행과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종합청렴도 평가대상에 지방의회 등 확대...
사각지대 없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 도모

(23. 3. 16. 국민권익위)

올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629개('22년 569개)로 확대되고, 청렴노력도 지표는 25%* 줄여 기관의 평가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세부과제 기준, 44개 → 33개로 지표 감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평가 기본방향과 대상기관을 정하고, 청렴체감도 측정항목 및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 안을 각급기관에 알려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는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 다만 지난해 평가과정 및 결과를 분석, 평가대상과 모형을 보완했다.

올해는 평가범위를 확대해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와 21개 연구원을 평가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또한 정원 50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22. 3분기 공시 정원 기준), 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 없이 청렴도를 평가한다.

<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안) >

합계 (개)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I (공기업)	II (준정부)	III (중점)	IV (지방 공기업)	V (연구원)			광역	기초 (시)
	I (장관급)	II (차관급)		I (시)	II (군)	III (구)										
629	25	21	17	75	82	69	17	32	55	45	40	21	16	22	17	75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설문항목과 평가지표도 보완한다. 특히,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올해의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과 현안에 맞춰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청렴노력도 영역을 총 12개 지표, 33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 청렴노력도('22년) : 총 14개 지표, 44개 세부과제

구체적으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지표를 신설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했다.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 효과성에 비해 평가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등은 조정·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노력이 실제 청렴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관들이 종합청렴도를 기관평가나 다음 해 계획수립 등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시기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평가시기 다음해 1월경 이루어지던 종합청렴도 발표를 1개월 정도 앞당겨 평가당해연도 12월('23년 12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더 빈틈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꼼꼼히

살피고, 워크숍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평가를 위한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우수기관·외부 전문가와 청렴도 낮은 기관 대상 청렴도 제고에 나서

청렴역량 진단, 우수시책 공유 등 맞춤형 청렴도 향상방안 제시

(23. 2. 2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청렴연수원에서 24개의 종합청렴도 저조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 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신청받았다. 이후 청렴컨설팅 신청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24개 기관을 23년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등 종합청렴도가 높은 12개 기관을 멘토기관으로 선정했다. 12개의 멘토기관은 24개의 멘티기관에게 청렴시책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개최되는 청렴컨설팅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8월까지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역량 진단 ▲외부전문가, 기관

담당자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는 자문회의 ▲우수시책 공유를 위한 그룹별 자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심층 진단을 통해 멘티기관의 내부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기관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23개 대상기관 중 17개 기관(73.9%)이 '2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대비 '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화성시, 의정부시 등 6개 기관은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서울 구로구는 종합청렴도 1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같이 청렴컨설팅은 대상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해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 정재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많은 기관에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향상됐다. 올해도 청렴컨설팅을 통해 우수기관의 시책과 제도를 공공분야에 확산해 청렴한 업무관행과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아프리카에 K-청렴정책 전수한다

가봉·마다가스카르·세네갈·코트디부아르 대상
실시간 온라인 반부패 연수 과정 운영

(23. 3. 28.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가봉, 세네갈 등 아프리카 4개국에 전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이번 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가봉 굿거버넌스부패방지부 및 국가부패부정축재방지위원회, 마다가스카르 국가부패방지청, 세네갈 국가경제범죄부패방지청,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부패방지부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54명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프랑스어로 진행되며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국내 반부패 법령과 함께 유엔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협약의 주요 내용도 함께 소개된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반부패 연수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국민권익위는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K-청렴정책을 전파하고 있다. 기존 영어 과정에 이어, 2020년에는 동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을 위한 러시아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올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어 과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67개국을 대상으로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반부패 연수과정의 실질적 성과 역시 입증됐다. 반부패 연수과정을 수료한 국가들은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61건의 반부패 업무 직접 적용사례를 보였다.

또한 작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부속서에 국민권익위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국제적인 인정도 받았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지난달 정부 발표를 언급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분야에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